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배포일자	2022년 7월 12일(화) 총 5매		
담당 부서	복지정책과	담당자	• 생활보장팀장 신유선 ☎440-2931 • 담당자 박진, 이경준 ☎440-2932,4		
사진(이미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복지제도 선정기준 완화해 사각지대 해소!

- 인천형 복지제도인 SOS 긴급복지·디딤돌 안정소득 선정기준 완화 -
 - 기존 제도권 밖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해 지원하도록 노력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정부 지원기준에 부적합한 위기사유 발생 가구 및 저소득층 빈곤가구의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시민 안심 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민선8기 출범을 맞아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첫 번째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실직, 질병 발생과 함께 최근 물가 급상승 등의 요인으로 저소득층 위기가구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말 기준 인천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는 약 16만 명으로 2020년 대비 12% 증가했고, 긴급복지 지원건수도 약 4백 건으로 13%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인천형 생활보장 복지제도인 「SOS 긴급복지」

와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7월 1일부터 기존보다 대폭 완화해 생계로 고통 받고 있는 저소득 시민들의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먼저, 「SOS 긴급복지」는 주 소득원의 실직, 질병, 사망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72시간 내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대상가구에는 생계비로 4인 가구 기준 130만4,900원, 의료비는 1인당 300만원 이내, 주거비는 4인 가구 기준 64만3,200원 이내를 지원하고, 교육비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선정기준 중 재산기준이 1억 8,800만원 이하였으나, 이번에 3억 원 이하로 완화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위기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디딤돌 안정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선정기준에 못미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가구에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다. 대상가구로 선정되면 생계비로 4인 가구 기준 76만 8,160원을 지원하고, 출산 시 70만원, 사망 시에는 80만원을 지원한다. 그동안 선정기준 중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40% 이하였으나, 이번에 50% 이하로 완화해 선정범위를 넓혔다.

< 인천시 시민 안심복지사업 개요 및 선정기준 완화 >

『SOS긴급복지 지원』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 상 : 위기사유 발생 가구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질병 등 위기사유 9개 항목 ○선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 (재산기준) : 1억8천8백만원 이하 → 3억원 이하 - (금융재산) : 1천만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 상 : 기존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 가구 ○선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 50% 이하 - (재산기준) : 1억3천5백만원 이하 / (금융) 3천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 : 고소득(연1억) 또는 고재산(9억) 이하 ○사적 이전소득 : 미적용

「SOS 긴급복지」와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생계 곤란 시민은 누구든지 주소지 관할 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 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인천형 생활보장 복지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홈페이지, 현수막, 카드뉴스 등 온·오프라인 홍보와 함께 문자, 우편 발송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洞)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통해 관내 생계 곤란 1인 가구와 복지 취약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하도록 하는 등 시민 주도의 복지공동체 역량 강화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김충진 시 복지국장은 “인천형 생활보장 복지제도 지원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기존 제도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 빈곤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참고> 1. SOS 긴급복지 개요
2. 디딤돌 안정소득 개요

참고1

SOS 긴급복지 개요

- 지원대상 : ①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 가정으로서 ②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과 ③ 기타 사항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긴급복지」 지원 종료 시점 6개월 경과후 동일사유로 「인천형 긴급복지」 지원 가능

- 위기 사유 (위기상황 해당시 先 지원 後 조사 원칙,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시행규칙 제1조의 2)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사각지대발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한시)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⑦ (한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소득·재산기준

○ (소득)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당초 (85% 이하)	1,653,090	2,771,072	3,565,496	4,352,918	5,120,838	5,870,953

○ (재산) 1억 8,800만원 ⇒ 3억원

○ (금융재산) 1,000만원 *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150% 반영

○ (재지원 제한) 2년 이내 → 6개월 이내 동일 사유로 재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최대지원 횟수는 긴급복지(정부형)와 동일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금전·현물 지원	위 기 상 주 급 여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304천원 (4인기준)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이내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643.2천원 이내 (4인기준)
	부 가 급 여	교육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초 124.1천원/중 174.7천원/고 207.7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106천원/월 -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 : 각 1회

참고2

디딤돌 안정소득제도 개요

- **사업기간** : 연중(소득평가액 확대는 2022.7.1.부터)
- **지원대상** :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 200여 가구
 - *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및 긴급복지(SOS긴급복지 포함)생계지원 대상자 제외
- **선정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각 요건 충족
 - (소득평가액) 중위소득 40%이하 ⇒ 50% 이하 가구

(단위: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22년)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선정기준 (중위50%이하)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 (재 산) 가구당 135백만원 이하
 - * 선정제외 : 금융재산 30백만원 초과가구, 100% 환산 자동차 보유 가구
- (부양의무자) 고소득(연1억, 세전) 또는 고재산(9억)이 아닌 경우

- **지원내용** : 가구 규모별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50%(정액지원)

(단위 :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현금급여	291,722	489,013	629,205	768,162	903,678	1,036,051

- (해산·장제급여) 출산시 70만원, 사망시 80만원